

#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

## 심의 · 의결

안 건 번 호 제2022-019-163호

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
피 심 인 (사업자등록번호 : )

서울시 송파구

대표자

의결연월일 2022. 11. 30.

## 주 문

1.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
가. 과 태 료 : 원

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
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
# 이 유

## I. 기초 사실

피심인은 \_\_\_\_\_ 를 제공하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(2020. 8. 5. 시행, 법률 제16930호, 이하 ‘보호법’이라 한다.)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.

< 피심인의 일반현황 >

피심인명	사업자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대표자 성명	주소	종업원 수(명)

## II. 사실조사 결과

### 1. 조사 배경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종합포털(privacy.go.kr)에 유출 신고 \_\_\_\_\_ 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·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 하였으며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### 2. 행위 사실

#### 가. 개인정보 수집현황

피심인은 \_\_\_\_\_ 운영하면서, \_\_\_\_\_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·보관하고 있다.

< 개인정보 수집현황 >

구분	항목	수집일	건수
회원 정보	(필수) (선택)		(유효) (분리보관)
합 계			

## 나. 개인정보 유출 경위

### 1) 유출 경과 및 대응

일 시		피심인의 유출인지 및 대응 내용

### 2) 유출규모 및 경위

(유출항목 및 규모) 이용자      명의 이름, 주소\*

\* 동·호수를 제외한 번지수까지의 주소

(유출경위) 피심인이      을      하면서 개발 실수로 이용자가      에 로그인하면 타 이용자의 이름·주소가 조회됨

## 3. 개인정보의 취급·운영 관련 사실관계

가.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

피심인은      개선을 위해 안드로이드 이용자 대상 업데이트를 하면서, 개발자가 이용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계정으로만 테스트를 하는 등 테스트를 소홀히 하여\* 이용자가 앱에 로그인 시 타 이용자(    명)의 이름·주소(상세주소 제외)가 조회되도록 한 사실이 있음

\* 피심인은 개발자 본인의 계정으로 테스트를 진행하였으나, 이용자 수가 생성 가능한 최대 스레드(Thread)를 초과하는 환경에 대한 테스트는 진행하지 않음

#### 4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'22. 8. 25.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'22. 11. 10.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.

### Ⅲ. 위법성 판단

#### 1. 관련법 규정

가. 보호법 제29조는 “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“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(마목)를 하여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“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·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「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-5호, 이하 '고시') 제4조제9항은 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, P2P,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 취급자의 컴퓨터와 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”고 규정하고 있다.

## 2. 위법성 판단

가.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행위{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중 접근통제}

피심인이 앱을 업데이트 하면서 테스트를 소홀히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, 고시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.

### < 피심인의 위반사항 >

위반행위	법률	시행령	세부내용(고시 등)
안전조치의무 위반	보호법 §29	§48의2① 제2호	•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(고시§4⑨)

## IV. 처분 및 결정

### 1.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(과태료)제2항제6호,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및 [별표2] ‘과태료의 부과기준’ 및 ‘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’(2021. 1. 27.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, 이하 ‘과태료 부과지침’이라 한다)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.

#### 가. 기준금액

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[별표2]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,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( )이 있으므로 위반사항에 대해 2회 위반에 해당하는 1,200만원을 적용한다.

< 「보호법」 시행령 [별표2] 2. 개별기준 >

위 반 사 항	근거법령	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(만원)		
		1회	2회	3회 이상
자. 법 제23조제2항, 제24조제3항, 제25조제6항, 제28조의4 제1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5조 제2항제6호	600	1,200	2,400

## 나.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

1) **(과태료의 가중)**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'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2]의 가중기준(▲조사방해, ▲위반의 정도, ▲위반기간, ▲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, 사업규모,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)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'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경우,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기준금액의 10%를 가중한다.

2) **(과태료의 감경)**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'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1]의 감경기준(▲당사자 환경, ▲위반정도, ▲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, ▲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, ▲사업규모, ▲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, 사업 규모,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)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'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경우 과태료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 내에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 완료한 점, 보호법 제32조2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인증(ISMS-P)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에 따라 기준금액의 50%를 감경한다.

#### 다. 최종 과태료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·감경을 거쳐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##### < 과태료 산출내역 >

위반행위(세부내용)	기준금액	가중액	감경액	최종 과태료
안전조치의무 위반 (접근통제)				

#### V. 결론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75조(과태료)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과태료 명령을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#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



2022년 11월 30일

부위원장    최 장 혁    (서 명)

위    원    강 정 화    (서 명)

위    원    고 성 학    (서 명)

위    원    백 대 용    (서 명)

위    원    서 종 식    (서 명)

위    원    염 흥 열    (서 명)

위    원    이 희 정    (서 명)

위    원    지 성 우    (서 명)